

여야, 설 앞 '국정 공백' 머리 맞댄다... 주초 실무급 조율

국정 협의회, 두번째 회의 검토...대치 정국 속 합의는 미지수 국힘 "개헌·연금 개혁 시급" vs 민주 "추경 먼저" 견해 엇갈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조만간 두 번째 실무협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엄·탄핵 과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9일 "이번 주 초 두 번째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첫 실무협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이 중심점을 상실한 상태에서, 협의회가 어떤 의제부터 우선 순위에 두고 풀어가야 할지 여야의 견해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현행 헌법 개정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개헌·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4개 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 개헌·연금 같은 거시적 이슈를 다루고, 법안 처리는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법안 처리는 여야 간 논의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대내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엄·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생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게 협의회 구성의 취지인 만큼, 개헌이나 연금 문제보다는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정치적 사안은 빠지고 시급한 경제, 안보, 민생을 챙기자고 모인 게 국정협의회"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는 추경이 꼭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회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다시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예산을 먼저 조기 집행해보고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개헌·연금 논의, 그리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 사이 안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렬, 야당 수순에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가 여야의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협상을 할 듯하다가 막판에 깨버리고는 이재명 대표 맞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양측의 신뢰가 없는데 국정협의회 논의를 할 때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민생 입법과제 준비... 경제·외교 이슈 주력

이재명 대표 은행권 간담회...외신 대변인 임명 대외 관계 챙기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야 지지율 흐름에 긴장감을 보이면서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는 모습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소홀하다고 지적돼 온 경제와 외교·안보 이슈에 주력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전개될 조기 대선 국면에 대비하는 태세다.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오차범위 내 역전이 발생한 현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여야의 지지율 역전이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권 교체라는 당의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판단 아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가볍게만 보지는 않는다"며 "조기 대신 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먼저 결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아직도 중도층 등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품위를 지키자"며 의원들에 언행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기초 아래 민주당은 20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민생 입법과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제발의, 간접고용자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금융소의 계층을 대상으로 상생 금융을 확대해달라고 은행장들에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외교 관계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영배·조정식·홍기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정계 인사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출국 전 회견에서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영승열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공식이던 당 외신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도 '대외관계 챙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인 대외(對外) 강경 투쟁 모드를 정국 안정과 민생 챙기기로 전환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와 내란 특검법의 국회 통과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권영세 "조만간 당 차원 개헌 논의"

개헌 특위 구성 방침... "지지 세력 연합·의견 청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을 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

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이던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분들과 연합해 여론을 더 들여보고 필요한 정치 제도, 정부 형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